

2천ha)했으며 201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수조사 결과 109만 그루로 예측됨에 따라 2015년 4월까지 전량 방제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확산, 외래병해충 유입 등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에서도 산림병해충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공군기지, 수출입항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공동협력방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컨설팅 확대(4천 건), 수목진단센터(7개소), 국·공립나무병원(12개소) 등 생활권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의 추진으로 2014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등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생태계 피해 최소화 및 국민행복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 산사태 방지는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주로 사전 점검·정비 및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해 1992년 이후 23년 만에 산사태 무재해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사업 시행,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집중 관리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국유림 확대

2015년에는 사유림 8천271ha를 매수했으며 2016년에는 8천1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관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가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수도권 주민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려고 소양강댐 상류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한라산 주변에 분포하는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지역 지하수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곳자왈 지역을 2009년부터 438ha를 매수했으며 2016년에도 6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해 양

■ EU·미국 불법조업국 지정 해제

미국과 유럽이 각각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I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가에서 지정 해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월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개선조치를 고려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한 불법

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경우 매년 2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되는 만큼 해수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다.

또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미국 측과 5차례에 걸친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교섭해왔다.

미국의 IU어업국 지정해제로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확정시 받게 됐을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 이어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불법 조업 감시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IU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에 따르는 EU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가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EU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정부가 불법어업 처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불법어업국 지정 시 국가 위상 훼손, 수산물 수출 금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 연안국,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 원양어선 감척사업도 추진했다.

■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 청신호

정부가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FAO 세계수산대학은 국제해사기구(MO) 세계해사대학을 벤치마킹해 개발도상국 등의 수산 인력을 대상으로 수산·양식 분야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석·박사 학위과정 고등교육 기관이다.

해양수산부와 FAO는 9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앞서 해수부와 FAO 사무국은 2014년 1월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향서에는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2015년 9월 말 제출하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제안서를 12월 이사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FAO 사무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수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열린 제153차 FAO 이사회에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FAO 세계수산대학 제안을 처음으로 공식 소개한 제153차 이사회에서 각 지역그룹 다수 회원국 지지를 받아 2016년부터 대학 설립에 필요한 FAO 내 공식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지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이번 이사회에서 리셉션을 여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3월 FAO 헌장법률위원회 검토를 시작으로 5월 재정위원회 · 프로그램위원회, 7월 수산위원회, 12월 이사회를 거쳐 2017년 7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

■ 불법포획 돌고래 복속 · 태산이, 6년 만에 고향바다로

제주 함덕 해역에서 야생 적응훈련을 해온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수컷 · 20세)와 복순이(암컷 · 17세)가 바다로 돌아갔다.

2009년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태산이와 복순이는 제주의 한 공연업체에 팔려 돌고래쇼에 동원됐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이들 돌고래를 사들이는 업체에 몰수형을 선고해 풀려났으나 기형과 건강 문제로 방류되지 못하고 서울대공원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해양수산부는 훈련을 거쳐 건강성과 야생성을 회복한 태산이와 복순이를 7월 6일 제주 앞바다에 방류했다.

5월 14일 함덕 가두리 시설에 온 이들은 바다 흐름을 익히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주변에 몰려든 돌고래 무리와 교감하면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왔다.

민관방류위원회는 태산이와 복순이의 기형, 장애,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자연과 비슷하게 조성한 환경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최종 방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물로 둘러싸인 가두리 내에서 생활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자연으로 보내는 것이 태산이 · 복순이를 위한 길이라고 해수부는 판단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2015년 12월 하순 제주도 남서쪽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한 4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 무리 속에 태산이와 복순이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4년 5월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상처를 입은 채 구조된 토종돌고래 상괘이 '오월이'(암컷 · 약 4세)도 훈련 후 건강성과 야생성을 회복해 10월 21일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

오월이는 구조 당시 호흡이 불안하고 염증 수치가 높았으며 심각한 탈진 상태였다. 이후 해양동물 전문 구조 · 치료기관인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았다.

■ 아라온호, 좌초한 우리 원양어선 구조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7천487톤급)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가장 앞둔 12월 19일 남극해에서 유빙에 좌초한 우리 원양어선 썬스타호(628톤급 · 승선원 39명)를 구조했다.

아라온호는 가로 15m, 세로 7m, 깊이 2m의 유빙에 얽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친 썬스타호의 구조에 나섰다.

썬스타호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오후 7시 30분 좌초 사고를 당했다. 북반구와는 반대로 여름철인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 잡이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유빙 사고에 대비해 이빨고기 조업은 통상 선박 두 척이 함께 출항한다. 썬스타호가 사고를 당하자 함께 갔던 코스타호가 예인줄을 연결해 유빙에서 탈출시키려 했다.

그러나 1차 구조작업이 실패해 해수부에 구조를 요청했고 해수부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승선원을 코스타호로 대피하도록 했다. 승선원 39명 중 34명이 대피했고 구조작업 지원을 위해 선장과 항해사 등 5명은 배에 남았다.

해수부는 주변 100마일 이내에서 구조 활동이 가능한 선박을 찾았으나 해당 선박이 없어 130마일(10시간 항해거리) 떨어져 항해 중이던 아라온호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남극 장보고기지 물품 보급과 로스해 연구활동을 마치고 연구원 50명의 귀국을 위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항으로 항해 중이던 아라온호는 구조요청을 받고 곧바로 방향을 바꿔 썬스타호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14시간 30분 만인 19일 오전 10시 현장에 도착한 아라온호는 30분간 썬스타호의 좌초 상황을 파악한 뒤 선체 아래 유빙을 깨는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코스타호와 함께 썬스타호에 각각 80m의 예인선을 연결하고 끌어내기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1시 10분 썬스타호를 유빙에서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사고 발생 18시간, 아라온호 도착 3시간여 만이다. 썬스타호 선원 39명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 한 · 중 해양환경 공동조사 6년 만에 재개

2009년 이후 중단된 한국과 중국의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가 6년 만에 재개됐다. 10월 5~18일 40개 조사 정점에서 한 · 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를 했다.

공동조사 목적은 황해 해양환경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함께 해역을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황해의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995년 제2차 한 · 중 환경협력공동위에서 한 · 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를 협력사업으로 채택하고 2008년까지 하다가 2009년 중국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다.

한국과 중국은 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4년 4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양국 실무자 회의에서 2015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동조사에는 한국 과학자 7명과 중국 과학자 14명이 참여했다. 조사 선박은 한국 탐구8호와 중국 절해함감호를 이용했다.

각국은 조사 정점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되 채취한 시료 등을 양국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분석한다. 조사 항목은 수온, 염분도, 투명도, 유분, 해저 퇴적물, 해저 서식 생물 등 총 41개다. 최종 보고서는 2016년 3월 발표한다.

지난 6년간 일어난 황해 해양생태계와 수질상태 변화를 분

석한 결과는 앞으로 한·중 해양환경 협력사업 기초자료로 쓰인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환경보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앞으로 공동조사 정점과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세월호 인양 결정 및 업체 선정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세월호 인양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는 넉달여 동안 연구를 통해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투입해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내려달라고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고, 인양결정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입찰을 통해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샬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했다. 상하이샬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로 지난달 중국 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인양작업에 참여하는 등 약 1천900건의 선박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해수부와 상하이샬비지 컨소시엄은 851억원의 세월호 인양 대금을 세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금지급 시점은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 작업 후, 세월호 선체인양 및 지정장소에 접안 후, 세월호 육상거치 완료 후로 정했다.

상하이샬비지는 2015년 8월 15일 진도 앞바다에 1만급 바지선을 가져와 세월호 침몰지점에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중국인 잠수사 90~40여 명(시기에 따라 인원이 다름) 바지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조류가 약해질 때마다 세월호에서 수중작업을 벌였다.

세월호 침몰해역은 워낙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혼탁한데다 특히 수심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 중국인 잠수사들도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인양팀은 2015년 말까지 세월호 내부 잔존유 제거, 출입문과 창문에 유실방지망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해수부는 2016년 7월 말까지 세월호를 육상으로 들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수산업

■ 개요

어가인구는 1970년 116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를 차지했으나 44년이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0.3%인 14만 1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4년 전체 어가인구 중 30세 미만은 2만 명(14.2%), 30세 이상 60세 미만은 5만8천 명(41.1%), 60세 이상은 6만3천 명(44.7%)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2014년 어가소득은 4천101만5천 원으로 도시가계소득 대비 72.2% 수준이다. 어업생산액은 7조3천 600억원이었다.

국내 수산업이 영세한 규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총 어선척수는 6만8천417 척으로 2013년의 7만1천287척에 비해 줄어 들었다.

어업별로는 원양 368척, 연근해 4만5천830척, 양식 1만6천992척, 내수면 3천150척, 기타 2천77척 등이었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3년 53.8kg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전갱이·삼치 등 어획량 증가

2015년 연근해어업 품목별 생산량은 멸치가 19만9천808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징어 13만2천 396t, 고등어 13만827t, 전갱이 4만2천906t, 갈치 3만9천488t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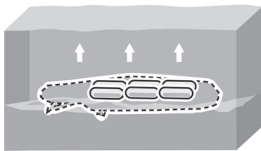
붉은대게 3만7천840t, 삼치 3만 5천54t, 참조기 2만7천795t, 청어 2

'상하이 샬비지' 세월호 인양방안 ① 정부가 검토한 방식과의 차이점

-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
- 작년 매출 3,220억원, 구난분야 전문인력 1,400여명 보유
- 지난 6월 중국 양쯔강 침몰 유람선 인양 작업에 참여
- 입찰 계약금액 851억원 제시
- 상하이 샬비지와 우리나라 업체 오션씨엔이아가 지분을 7대3으로 나눠 컨소시엄 구성

1 선체 중량 감소

선체 내 빈공간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선체를 약간 들어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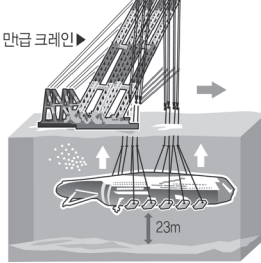
2 인양용 빔 설치

선체 아래에 3.5m 간격으로 50여개의 인양용 철제 빔 설치



3 선체 부양 후 수중이동

인양용 빔을 1만급 크레인에 연결해 선체를 수심 23m까지 끌어올려 2km 가량 떨어진 안전지역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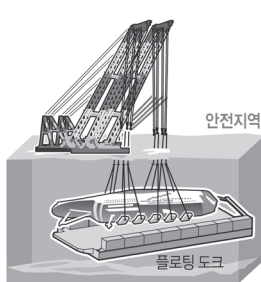


① 선체 밖에 빔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검토했던 선체에 구멍을 뚫는 방법에 비해 선체 훼손 가능성 적음

② 애초 검토했던 3m가량 들어올리는 방법보다 수심을 높여 이동하기 때문에 선체가 해저면에 닿아 손상될 위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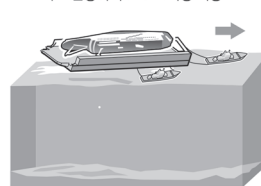
4 반잠수식 플로팅 도크에 선적

안전지역으로 옮겨진 선체를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플로팅도크에 올린 후 배수작업



5 목포신항으로 이동

목포 신항까지 120km가량 이동



6 목포 신항에 육상에 거치

목포신항에 내려놓음



만4천31억, 꽃게 1만6천263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꽃게는 온난화 여장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이동해 자원량이 줄어든 여파로 어획량이 2014년보다 35% 감소했다. 갈치는 산란 자원량 감소와 미성어 어획 증가가 맞물려 어획량이 15% 줄었다.

반면 전갱이, 삼치, 고등어는 청어와 멸치 등 먹이생물 어종이 늘어 어획량이 각각 2014년보다 81%, 23%, 7% 증가했다.

참조기는 10~11월 서해 남부해역과 제주도 사이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근해안강망어업 등의 어획이 늘면서 전체 생산량이 11% 늘었다.

엔저 등의 여파로 수산물 수출물량은 65만1천200t, 수출 금액은 19억2천550만 달러로 각각 2014년보다 6.9% 줄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참치 수출액은 15.1% 감소했다.

수산물 수입물량은 3.6% 증가한 140만8천t, 수입액은 1.7% 늘어난 43억9천580만 달러였다. 수입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계(27.8% ↑), 연어(13% ↑), 낙지(12.8% ↑) 등이었다.

■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강화

한국과 중국이 무허가 어선에 대한 물수를 추진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10월 29~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중국 무허가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 중국에 인계해 몰수토록 하고 한국이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을 인계·인수해 몰수하거나 상대국에서 직접 몰수 처리하는 것이다.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하는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아 마련한 대책이다.

또 무허가 어선의 우리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 단속 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순시(연 2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 10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왼쪽)과 중국측 농업부 짜오싱오 어업국장이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있다.

허가 어선은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는 점을 고려해 모범 선박 지정제도 등을 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하면서 어획량 허위보고 방지 조치 등을 강화한다.

어선이 지정된 지점만 통과하도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또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각종 위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두 나라가 단속 정보를 공유해 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김 수출 3억 달러 돌파

김이 조미김, 스낵김 등 가공식품 개발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산물 수출을 이끄는 '수출 효자'로 떠올랐다.

김은 전체 수산물 수출의 16%를 차지했으며 참치에 이어 수산물 수출 2위 품목이다.

김은 2010년 수출액 1억520만 달러를 달성한 후 수출실적이 연평균 28% 증가했다. 2015년 김 3억545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처음으로 수출액 3억 달러를 넘었다.

2015년 세계 96개국으로 수출한 김은 총 5천144만 속이다. 이 김을 길에 붙이면 지구를 27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엔저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해 2012년 이후 수산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김의 수출 실적은 두드러지는 성과다.

업계가 스낵김, 김수프, 조미김 등 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정부가 김 가공설비 현대화 등을 지원한 결과로 해 수부는 분석했다.

김 소비가 밥반찬에서 스낵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소비시장이 넓어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김을 밥반찬으로 먹지 않는 미국으로 김을 가장 많이 수출(7천209만 달러)했다. 이어 중국(6천643만 달러), 일본(5천118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CJ제일제당과 동원F&B 등 대형 식품업체도 잇따라 김스낵 제품을 출시해 시장 규모도 커졌다.

■ 수협 구조개편 마무리 단계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월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을 보통주 자본조달이 가능한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사업부문을 전문성 있는 해양수산 금융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도경제 사업부문을 유통·판매·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수협은 2016년 하반기까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등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한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인 수협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 받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0

월 4일 수협은행이 발족하고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강화된 국제자본규제인 바젤Ⅲ를 도입할 수 있다.

또 수협을 수산물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경제사업 부문에 전담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수산물 판매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운·항만

■ 항만물동량 14억5천만...사상 최고

2015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4억4천 93만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출입 화물은 12억706만 t, 연안화물은 2억4천207만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총 2.3% 증가한 셈이다.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은 수출입 증가로 2014년보다 각각 7.7%, 5.2%, 3.6% 늘었다. 반면 포항항, 목포항, 평택당진항은 2014년보다 각각 6.2%, 5.2%, 4.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목재처리 물동량이 2014년 대비 28.4%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모래 9.9%, 자동차 8.4% 순으로 늘었다. 반면 기계류(-12.0%)와 철재(-1.1%)는 물동량이 줄었다.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0억1천952만으로 2014년보다 2.2% 증가했다.

전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도 부산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환적 물동량이 늘면서 2014년 대비 3.3% 증가한 2천562만6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2014년 대비 4.0% 증가한 1천943만4천TEU를 기록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특히 환적물량이 7.0% 증가한 1천88만5천TEU로 개항 이래 최초로 1천만TEU를 넘었다.

■ 세월호 여파로 연안여객선 이용객 감소

2015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천538만 명으로 메르스 여파에도 전년보다 8% 증가했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 1천60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1천427만 명으로 급감했으나 2015년 1천538만 명으로 다시 늘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특히 2015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가운데 섬주민은 2% 증가한 데 비해 일반 여행객이 10% 늘었다는 점에 해양수산부는 의미를 뒀다.

2015년 1~5월까지 누적 이용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메르스 여파로 6~7월 주춤하다가 8월 이후 점차 정상을 되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항로별로는 통영의 욕지도 항로가 2014년 65만 명에서 2015년 79만 명으로 20%나 늘었다. 보길도 항로는 13%, 매물도 항로 9%, 울릉도 항로 8%, 금오도 항로 6%, 서해5도 항로 3%, 홍도 항로 2% 순으로 대부분 관광항로에서 이용객 수가 증가

했다.

해수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여수-제주·목포-제주·우수영-흑산 등 장거리 항로에 대형 카페리 여객선 투입, 여객서비스 고급화 전략 등의 효과로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 국제해사기구 첫 한국인 사무총장 탄생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15년 6월 국제해사기구(IMO)의 첫 한국인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2016년 1월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월 8일 청와대를 방문한 임기택 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1959년 설립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유엔 산하 해양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62년 가입했다.

171개 회원국 가운데 40개국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사무국 직원은 300여 명이다. 북한도 1986년 가입했다. 임 사무총장은 5차례에 이르는 투표 끝에 '해양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적 퇴치 및 해상 보안 ▲해운 물류 ▲해상교통 촉진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하기 때문에 해운·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지금까지 IMO는 60개의 국제협약과 1천 800여 종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2015년 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으로 8차례 연속 진출했다. 171개 회원국 가운데 40개국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이사회는 A그룹(해운국 10개국), B그룹(화주국 10개국), C그룹(지역대표 20개국) 등 모두 40개 나라로 구성돼 2년마다 재선출한다.

한국은 1991년부터 C그룹 이사국에 속해 있다가 2001년 A그룹이 8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 때 선출돼 지금까지 14년 연속 지위를 유지했다.

IMO 이사국은 그룹별로 새로운 입후보자가 생기면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2015년 A그룹에는 지원하는 나라가 없어 10개국이 그대로 유지됐다.

상임이사국으로 평가되는 A그룹 이사국은 최상위 해양국가 10개국이 선출되며 국제 해운·조선시장을 좌우하는 IMO의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 세월호 재발방지·카페리 선령 25년으로 축소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 방안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과거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 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고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7월 7일부터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됐고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됐다.

또 여객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취항업체 선정에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조업

■ 개요

201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2.6%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투입, 각종 소비확대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4분기 성장률은 0.6%로 집계돼 분기성장률이 다시 0%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우리나라 교역 1조 달러가 2015년 무산됐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심해진데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유가가 교역을 얼어붙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실물경기

201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GDP)은 2.6%에 그쳤다. 2012년 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애초 목표로 잡았던 3% 성장에 실패하면서 2013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의 성장률로 내려앉은 것이다.

민간소비는 2.1% 늘어 2011년 이후 4년 만에 2%대로 올라섰고 정부소비는 3.3% 늘었다. 건설투자는 4.0% 증가해 2014년의 1.0%보다 높아졌다.

제조업은 연간 성장률이 1.4%에 그쳐 2014년 4.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수출은 0.4% 증가하는데 그쳐 2009년(-0.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15년 4분기 -0.2%포인트로, 2014년 3분기 이래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됐다. 연간으로는 -1.2%포인트로, 2010년(-1.4%포인트)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였다.

2015년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유가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을 받아 2014년 3.7%보다 크게 높은 6.4%를 기록했다.

■ 수출입

2015년 수출액은 5천272억 달러로 2014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천368억 달러로 16.9% 감소했다.

무역규모는 9천640억 달러로 2014년 1조982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2012년 -1.3%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9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가하락에 따라 수출금액은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5.4%(2015년 1~3분기 실적)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랐다.

품목별로는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감소율이 각각 36.6%와 21.4%를 기록했다. 화장품(53.5%), OLED(25.0%), SSD(26.6%) 등 신규 유망품목의 수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24.3%나 늘었다. 현지 생산기지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3위의 수출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 외 미국(-0.6%), 중국(-5.6%), EU(-6.9%), 일본(-20.4%) 등 주요국의 수출은 모두 감소했다.

■ 주요 산업별 동향

• 일반기계산업

기계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 사업이다. 건설광산기계, 공작기계, 금형, 냉동공조, 내연기관, 동력전달장치, 운반하역기계, 농업용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2015년 기계산업(선박 제외)은 중국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회복세 약화, 엔저에 따른 해외시장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기계산업동향연구회에 따르면 5대 기계산업(선박 제외) 생산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450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1천810억8천만 달러로 2.4% 줄었고 수입 역시 1천4억4천만 달러로 0.4% 감소했으며 무역 흑자는 806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5대 기계산업은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를 일컫는다.

이중에서 일반기계 생산은 101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했으며, 수출은 446억1천만 달러로 0.9% 감소했고 수입은 341억3천만 달러로 5.0% 줄었다. 무역수지 흑자는 104